

新자원민족주의의 확산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한 상 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상무이사)

1. 신국가주의의 대두

역사는 이합집산을 반복한다. 뭉치면 흩어지게 마련이고, 흩어지면 다시 뭉치게 마련이다. 세계는 지난 20여년간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는 기업들이 달리고 있다.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펼치면서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보호주의가 다시 대두되면서 新국가주의(New Nationalism) 시대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각국간 무역 및 금융장벽이 높아지고, 자원보호를 위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규제를 강화하고, 후진국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新국가주의의 원인은 글로벌 디바이드(Global Divide)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디바이드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가. 컨트리 디바이드(Country Divide)

글로벌화는 컨트리 디바이드를 심화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글로벌화를 지지하는 국가나 학자들은 그들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글로벌화가 전세계 인류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들고 있

다. 그러나, 본격적인 글로벌화가 시작된지 20여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글로벌화의 과실은 선진국에게만 돌아가고 후진국은 영원히 후진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는 비단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조금 더 잘사는 나라와 조금 더 못사는 나라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컨트리 디바이드로 인하여 앞서가는 나라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윤택함을 지키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나라들은 앞서가는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신국가주의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인더스트리 디바이드(Industry Divide)

산업혁명 이후 인더스트리 디바이드가 과도하게 진전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년간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군림해왔다. 1990년대 들면서는 금융산업, 지식산업 등 3차산업들이 최고로 각광받는 산업으로 부상했고, 요즘은 2차와 3차가 융합된 산업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광업, 농업, 수산업 등 1차산업은 그들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간 홀대를 받아왔다.

1980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우리는 25년간을 석유

를 너무 싸게 사용해왔다. 곡물도 별반 다름이 없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2, 3차 산업 종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간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왔다. 광물자원도 가격이 저렴하게 유지되어 있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수요의 급증을 초래한 반면 공급의 증가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1차산업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것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다. 컬처 디바이드(Culture Divide)

경제의 글로벌화가 컬처 디바이드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다. 그동안 글로벌화를 주창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 경영학자들이었다. 그들에 의해서 회계기준, 은행간 거래기준 등 경제, 경영, 금융 등과 관련된 국제적인 제도나 통계들의 통합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언어, 종교, 관습 등 문화적인 측면이다. 전세계는 국경의 장벽 이외에도 컬처 디바이드가 존재한다.

종교는 크게 구분한다 해도 최소한 세가지가 되며, 그 종교간의 장벽은 너무나도 높다. 멀리는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현재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까지 충분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고 있다.

언어는 전세계적으로 수십가지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영어가 국제공용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조차 영어로 의사소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보스니아-세르비아, 아프리카 부족간의 죽고 죽이는 끊이지 않는 전쟁 등에서 보듯 인종문화적인 차이도 쉽사리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인 돈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의 글로벌화는 그와 같은 매개체를 찾을 수가 없다. 혹시, 어느 영화에서처럼 우주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면 또 모

를까. 이와 같은 문화적 장벽을 통합하지 못하고서는 글로벌화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예가 9.11 테러이고, 인터넷에서의 자국어 도메인 설정 움직임이다.

2. 新자원민족주의의 등장과 자원안보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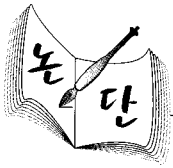
가. 新자원민족주의의 대두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지닌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은 자원을 전략적 무기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를 자원민족주의라 한다.

중남미에서 대두된 자원민족주의는 1960년대 UN에서 천연자원 항구주권을 의제로 확정함에 따라 더욱 발전하여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등과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자원민족주의는 퇴조를 보여왔으나, 신국가주의가 확산되면서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자원민족주의는 원유와 원자재의 가격 급등, 그리고 이에 따른 곡물가의 동반 상승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전과의 구분을 위해 이를 新자원민족주의라고 칭한다. 원유를 중심으로 한 자원민족주의는 남미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동 지역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중국, 브라질, 호주 등을 중심으로 철강 원료를 무기화하고 있다.

이러한 원유 및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新자원민족주의는 급기야 식량자원으로 확산되어 곡물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 곡물자원 민족주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영향이 크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산물(Agriculture)의 애그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플레이션의 합성어를 나타낸다. 즉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폭등을 의미한다.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新자원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재해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자원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신자원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자원 확보하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70년대 이후 에너지 부족 국가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국가 주도 장기 전략을 수립했으며 해외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여 1993년 이후 원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자원 빈국에 속하지만, 해외 자원 개발 및 경제 원조를 활용한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해 유전, 뉴멕시코, 호주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 남미 등 자원 부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상재해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어 재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 역시 곡물 작황 및 자원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나 미얀마의 사이클론 등과 같은 거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세계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한국의 자원안보 현황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국의 자원안보 역시 안전하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원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광물 자원 제외)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 2003년 이후 96.7%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원유 자급률 역시 0.95%로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

도는 1991년 91%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에는 97.6%로 정점에 달했다가 서서히 하락하여 2007년에는 96.7%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22위 수준이다. 또한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한 후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원유 자급률을 산출한 결과, 한국은 0.95%로 그리스의 0.97%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원유를 자급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노르웨이, 멕시코, 덴마크, 캐나다 등이 있으며, 원유 자급률은 노르웨이가 1,050.7%로 가장 높았으며, 멕시코 171.2%, 덴마크 161.7%, 캐나다 143%의 순을 기록했다.

둘째, 한국의 광물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금속광의 자급률은 2004년 84.3%로 정점에 달했다가 최근 하락하여 2007년에는 72.8%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속광의 자급률은 1983년 16.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 0.21%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나 2007년 1.1%를 기록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물 전체의 자급률은 1996년까지 30%대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7년 이후 하락하여 2006년에는 최저치인 10.2%를 기록했으며 2007년 역시 10.4%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수입 광물인 철광의 경우 2001년 자급률은 0.05%였는데 이후 서서히 상승하여 2007년에는 0.61%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곡물 자급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작황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각 연도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평균 작황을 고려하기 위해 5년 이동평균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곡물 자급도의 이동평균은 2001년과 2002년의 30.4%와 30.3%를 제외하고 29%대를 기록했지만, 2004년 이후 28%대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곡물 자급도가 하락한 것은 전반적으로 WTO 협상에 따른 농업에 대한 보조금 감

축과 개방에 따른 수입 확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사료용 곡물 가격 급등과 함께 조류독감 등과 같은 가축 전염병에 따른 먹거리 감소는 한국의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향후 전망

가. 세계 경제의 향방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세계 경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신국가주의, 신자원민족주의의 미래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을 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글로벌화가 더욱더 진전되는 가운데 신국가주의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자원민족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컨트리 디바이드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신자원민족주의도 신국가주의와 병행하여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를 뒤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 그러기에는 세계 경제가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에 수반되는 부작용이나 걸림돌로 작용하는 디바이드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바이드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각각의 국가, 산업, 또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또 빠르게 글로벌 경제 전체의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나.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산업 차원에서는 1차산업의 반란은 좀더 진행될 것이다. 대부분의 1차산업은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부존 자원량이 한정되어 있고 농사지를 땅, 고기잡을 바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급 차질 문제가 지속되거나 또는 악화되는 상황에서 후진국들이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1차산업을 대체 보완하는 산업이 부상할 것이다. 자신의 소비 수준을 낮춰가는 일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따라서 사람들은 쉽게 소비를 줄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산업이 신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 예이다.

다. 사회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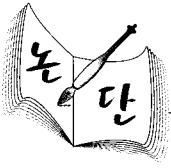
사회 차원에서는 광물자원이나 환경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자원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도 커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소비자 의식을 반영하여 세계 각국이 자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차량 규제이다. 또한, 문화적 개방성을 지닌 국가가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반대 정서가 없고, 외국 문화에 대해 배척하지 않는 풍토가 외국 비즈니스를 끌어들이 수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폐쇄적인 문화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4. 대응 방안

가. 정부 차원의 대응

이러한 자원안보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수요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해외 유전 및 광산을 적극 개발하여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 보유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강화 등을 통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여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

둘째, 전력 생산 에너지원 중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를 다양화해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화석 연료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의 자주 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고유가 및 화석 연료의 고가에 대비하여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R&D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재생 가능 연료 및 대체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휘발유 및 경유 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의 연비 향상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에게 시설 도입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위주의 이른바 '省 에너지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 가격 급등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며,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 구조가 전환되어야 한다.

여섯째,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계 각지에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해야 한다.

일곱째, 농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로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성 및 형평성 문제가 아닌 식량안보 등과 같은 다원적 기능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WTO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나. 기업 차원의 대응

고유가, 고원자재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 압력을 줄이고, 자원에 대한 헤지 및 투자를 활성화하며 고유가를 사업 기회로 활용하여 기업의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생산비 증가 압력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 설비 및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상품 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헤지 및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동안 자원은 제품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원료로 여겨졌으나, 상품 가격의 폭등과 新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인하여 자원에 대한 견해를 투자의 대상으로 바꿔게 되었다. 상품 선물시장을 단순히 헤지 차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일정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유가를 사업 기회로 활용하고 기업의 수익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고유가의 위험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